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2. 6. 4(월) 조간		
배 포 일시	2012. 6. 1(금) 14:00	담당부서	예산실 예산관리과
담당과장	정희갑 과장 (2150-7190)	담당자	강준모 사무관 (2150-7191)

제 목 : “ 3일간의 재정콘서트, 나라살림을 말하다 ”

- '12~'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-

-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과 공동으로 6.12일부터 6.14일까지 '12~'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'13년 예산편성을 위한 「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」를 개최할 계획

* 일시 · 장소 : 6.12(화)~6.14(목), 외환은행 본점 4층 강당 (을지로 소재)

- 금번 토론회는 기존의 딱딱하고 전형적인 토론회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“3일간의 재정콘서트, 나라살림을 말하다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

○ EBS, 뉴스Y, KTV 등으로 방송매체를 확대*

- * EBS(복지, 교육), 뉴스Y(일자리, 교육, 지방재정)는 특별 프로그램 편성
- * KTV는 전 분야 녹화방송

○ 쟁점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분야는 토론 전문 사회자*가 진행하고, 토론참여자를 6명 내외로 축소

- * 손범수 (前 KBS 아나운서) ⇒ 복지 · 교육 분야 / 엄길청 (경기대 교수, EBS 초대석 등 토론프로그램 다수 진행) ⇒ 일자리, 지방재정 분야

○ 정책고객의 인터뷰가 포함된 동영상(5분)을 통해 발제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토론회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몰입도 제고

- 이번 공개 토론회는 **이명박 정부의 5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서**
 - 복지·일자리·중소기업 지원 등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**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**
- 토론회에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, 소상공인 등 **정책고객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 진행**
 - 관심있는 **일반 국민도 토론회 참석은 물론, 스마트폰,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질의·답변을 통해 참여 가능**

☞ 참여신청 및 문의

-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(☎2150-7198), 이메일(parkyaena@mosf.go.kr),
-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트위터

※ 관련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와 KDI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

-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(6월 20일) 내용을 검토한 후, **‘12~’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‘1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(9월말)**

【 ‘12~’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】

- ‘12. 4.28 : 201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
- ‘12. 6월 : 공개토론회 개최(6.12~6.14), 각 부처의 ‘13년 예산요구 접수(6.20)
- ‘12. 9월말 : ‘13년 정부예산안 및 ‘12~’1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

[참고1] 공개토론회 일정 및 분야별 토론주제

[참고2] 분야별 주요 발표내용 (요약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고 1

공개토론회 일정 및 발표 주제

☐ 토론회 일정

○ 6.12(화) ~ 6.14(목), 10:30~18:30, 외환은행 본점(을지로 소재)

	6.12(화)	6.13(수)	6.14(목)
10:30~12:00	총괄·총량	복 지	SOC
14:30~16:00	일자리	교 육	지방재정
17:00~18:30	중소기업	R&D	

※ 방송일정상 회의시작 30분전 회의장 도착 요망, 회의시작 후 입장 불가

☐ 발표 주제 (※ 해당분야 토론회 종료후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)

분 야	발표 주제
보건·복지	복지분야 투자방향 /보육 투자확대 및 효과성 제고 방안
일 자 리	일자리분야 투자방향 / 글로벌·문화 일자리 창출방안
교 육	교육분야 투자방향 / 교육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
지방재정	지방재정 투자방향 / 지방재정 현황 및 건전화 방안
산업·중소기업 ·에너지	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 투자방향 /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
R&D	R&D 투자방향 / 기초·원천 R&D 투자 내실화 방안 / 산업기술 R&D투자 효율화 방안
SOC	SOC분야 투자 효율화 방안
총괄·총량	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전략

참고 2

분야별 주요 발표내용 [요약]

※ 동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의 의견이며, 기획재정부 공식의견이 아님에 유의
바람. 구체적인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은 분야별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1

보건·복지 분야

[1] '12~'16 투자 방향

□ '일하는 복지', '맞춤형 복지', '지속가능한 복지'라는 정책기조 下에
매년 복지투자를 지속 확대

* 복지지출(조원) : ('07) 61.4 → ('10) 81.2 → ('12) 92.6

*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(%) : ('07) 25.9 → ('10) 27.7 → ('12) 28.5

○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,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, 장애인 연금·
활동지원 도입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

□ 저출산·고령화 진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할 전망이고,
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

□ 향후 복지재정 투자방향은

① 사각지대 해소, 복지서비스 질 개선 등 복지체감도 제고

② 일과 복지 연계 등 『복지-성장』 선순환 구조 확립

③ 국가·개인·기업이 함께하는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

○ 아울러, 지속가능한 복재재정 확보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,
세출구조조정, 조세제도 개편 등의 노력 추진 필요

[2] 보육 투자확대 및 효과성 제고 방안

□ '국가가 책임지는 보육'이라는 정책에 따라 보육지원을 크게 확대

* (보육료·유치원비) '13년까지 쉰 계층, (0~2세 양육수당) '13년까지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

○ 그러나, 0~2세 보육시설 과다이용, 아동 급식·안전·위생, 보육료
부정수급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지적(감사원, 예정처 등)

□ 향후에도 3~4세 누리과정 등을 통해 보육투자는 확대해 나가되,

○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및 투자효과성을
제고할 필요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(성과 및 과제) 지난 5년간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연평균 5.2% 증가('08년 6.1 → '12년 9.6조원) ⇒ 고용위기 조기 극복*에 기여
 - * (최근 고용동향)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+40만명 증가, 실업률 3%대 하향 안정화
- '고용없는 성장' 문제, 청년·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 체감도,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
- (투자방향)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견인차 역할 강화(R&D 투자 확대, 서비스업 선진화, 창업·창직 활성화 등)
 - '일하는 복지' 구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유인형 안전망 구축에 중점
 -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구조화
 - 글로벌·문화 일자리 등 새로운 지평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

[2] 글로벌·문화 일자리 창출 방안

- (글로벌 일자리) 중동·아프리카 등 향후 진출이 유망한 신흥지역 지원 강화, 선진국은 재정지원보다는 기회창출에 주력
 - 인턴·봉사단 참여자 등 해외사업 경험자를 지속 관리하여 지역 전문가로 육성, 베이비부머 퇴직인력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
- (문화 일자리) 한류효과를 연계한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대, 열정·창의성 발휘가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
 - 청년 창업·창직 활성화로 유망직종 창출, 콘텐츠 분야 R&D·인력양성 강화, 문화예술분야 창작지원 사업 활성화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최근 5년간 교육투자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대로 31.2('07) → 41.2조원('11)으로 연평균 7.3% 증가

* 지방교육재정교부금(조원) : ('07) 26.2 → ('10) 32.3 → ('11) 35.3

- 향후에도 공교육 내실화,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및 고등교육 기회균등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전망
- 고교 다양화, 영어공교육 강화, 교과교실제 확대, 학교폭력 예방 등 공교육 개혁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점 투자
- 국가장학금·튼튼학자금(ICL) 지원으로 등록금 경감을 유도하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

[2] 교육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

- 연도별 교육시설 투자비는 3.4('06) → 6.0조원('10)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

- 초·중등 학령인구 감소*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,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교육시설 투자소요가 지속 발생

* 초·중등 학령인구 예측(2011, 이영 교수) : ('11) 6,929 → ('30) 4,398천명

- 지역별·학교별 학교시설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체계 마련 필요
-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소규모 학교 적정화를 추진하고, 도심지역 과소·과밀 학교 해소 정책 추진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통해 가용재원 지속 지원, '10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신설 통해 지방재정 지원 지속 확대

* 이전재원(조원) : ('07) 73.3 → ('08) 84.8 → ('09) 90.8 → ('10) 89.6 → ('11) 95.9

* 지방소비세(조원) : ('10) 2.5 → ('11) 2.8

- 향후에도 지방교부세 지속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

* 지방교부세(조원) : ('12) 33.0 → ('14) 39.5 → ('16) 46.7 (연평균 9.2% 증가)

* 총지출(조원) : ('12) 33.0 → ('14) 39.5 → ('16) 46.7 (연평균 9.2% 증가)

- 반면,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·전시성 대규모 SOC나 국제행사 유지 등에 따른 지출을 억제하고, 세출구조조정 유도

[2] 지방재정 현황 및 건전화 방안

- (재정 현황) 전체 예산 150조원('10년기준) 중 지방세 비중이 33%

- 반면, 최근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복지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이 '08년 30.4%에서 '12년 32.3%로 증가

- (외국과 비교) 일본은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이 46.7%('10년)로 높은 수준이나 이는 복지 등 국가기능의 지자체 분담율이 높은데 기인

* 지자체 분담비율 : 사회복지비(연금제외) 72%, 교육비 89%, 경찰비 78%

- 서울·울산·경기 등 각 지자체별 지방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여 지방세수가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

* 총세입대비 지방세 비중 : 서울(62%), 울산(47%), 경기(46.5%),
OECD 국가 중 스웨덴·독일 주정부가 60%대 중반으로 최고 수준

- (복지지출 부담 개선방안)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, 광역-기초간 (광역시-자치구 등) 역할 재정립, 중앙-지방간 협의강화 등 검토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(산업)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고,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
 - 잠재성장률 하락과 신흥국들의 기술추격에 대비하여, 신성장동력 육성,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
 - 중소·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,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해 내수 기반 마련
- (중소기업)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, 기술개발, 인력, 수출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
 - 특히,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사전조정 및 유사·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
 - * 중소기업 지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졸업제·상한제, 정책일몰제 등 도입 검토
- (에너지) 에너지저소비 경제구조 전환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 및 산업경쟁력 강화, 자원개발 역량강화 추진
 - 에너지절약시설펀드, 자원개발펀드 등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전력수급안정 정책도 추진

[2]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

-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, 정책자금·교육·컨설팅 지원 강화
 -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소공인에 대한 특화 지원도 추진
 -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, 사업전환 및 전직 지원 강화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개편하여 시설과 경영이 혼합된 중·장기적(3~5년) 차원의 활성화방안 마련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☐ 그동안 정부는 R&D투자를 지속 확대(최근 5년간 연평균 9.7%)하여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수준*에 도달

* OECD국가, '10년 기준 : (GDP대비 정부R&D 투자비중) 4위, (총R&D 투자비중) 3위

- ☐ 양적 확대보다 R&D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창조·융합·선도적 R&D분야에 지원을 강화
 - 정부역할이 필요한 기초과학, 거대과학, 공공분야 R&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되 R&D 투자 효율성 제고

[2] 기초·원천 R&D투자 내실화 방안

- ☐ 기초연구사업(과학벨트사업 및 대규모 집단연구사업 등)간 역할 정립을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제고 추진
 - 사전 연구기획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의 집행체계 보완, 기초과학 분야 대형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효율화 추진

[3] 산업기술 R&D투자 효율화 방안

- ☐ 민간부문의 R&D 역량증대에 따라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R&D 투자는 지양
 - 민간투자가 곤란한 장기과제 및 고위험 분야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원천연구에 집중
 - 대기업 지원은 최소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을 강화

[1] '12~'16 투자 방향

-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SOC 투자*를
경제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효율화
 - * SOC 예산 : ('07)18.4 → ('08)20.5 → ('09)25.5 → ('10)25.1 → ('11)24.4조원
- 교통시설 투자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
 -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, 신설보다는
기존 도로의 효율성·안전성 제고 노력 강화
 -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하되,
연계·환승체계 구축 등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효율화 도모
 - 4대강 사업으로 개선된 보·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을
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

[2] SOC 투자효율화 방안

- (연계교통체계 구축) 산업단지,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
연계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물류거점의 경쟁력 확보
- (점개념 투자 확대 및 운영효율 제고) 병목지점 개선 등 도로
결절점 위주의 시설 개량 확대 및 ITS 구축·위험도로 개선 등을
통한 도로의 용량 증대·안전성 강화
- (철도시설투자과 수요개발노력 병행) 고속철도 적기 완공과
국가행사 지원 등 수요가 많은 노선 우선 개통에 집중 투자
 - 또한, KTX 연계망 투자를 통해 서비스지역 확대 및 수요 창출
- (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명확화) 광역철도, 하천,
항만재개발 등에 대한 명확한 국가의 지원기준 확립

[1] 최근 재정정책 동향

- '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났으나, '10년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

[2] 경제 · 재정 여건

- 완만한 성장세 유지가 예상되나, 유럽 재정위기, 이란사태,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
- 잠재성장률 하락, 의무지출 증가,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 및 자치단체 재정확충 요구 등은 재정의 중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당

[3] 중기 재정운용 방향

- 재정운용 중점은 국가재정운용계획('11~'15년)의 '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
 -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입확보 노력, 강력한 지출구조조정, 재정지출 수반 법률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등 필요
- 경제분야는 하드웨어적 재정투입보다 규제개혁, 경쟁정책 강화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고할 필요
 - 복지분야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정착도를 높이고 생계지원을 강화하되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많은 노력 요구
 - 지방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자체적 비용 절감노력과 지방세 징수노력이 선행될 필요